

No. 2013-41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10. 14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과제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간 사항지표

- 엔화환율 : 미국의 재정문제 협의 전망으로 약세
- 장기금리 :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 상승세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10.7(월)   | 10.8(화)   | 10.9(수)   | 10.10(목)  | 10.11(금)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    | 97.12     | 96.75     | 97.36     | 97.67     | 98.29     |
| 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    | 1,102.30  | 1,106.69  | -         | 1,101.02  | 1,095.81  |
| 닛케이평균주가(종가)          | 13,853.32 | 13,894.61 | 14,037.84 | 14,194.71 | 14,404.74 |
| 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 | 0.640     | 0.655     | 0.650     | 0.655     | 0.655     |

### 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8월 경상수지는 1.6천억엔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폭은 감소
- 2013년 8월 무역수지는 9.6천억엔 적자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
  - \* 수출물량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, 엔저에 의한 연료수입가격 상승 영향
  - \* 對한국 무역수지는 1.8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

| 구분              | 2012       | 2013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월     | 2월    | 3월    | 4월    | 5월     | 6월    | 7월    | 8월    | 9월    |
| 실질GDP증가율(연율,%)  | 1.2(2.0)   | 4.1(P) |       |       |       | 3.8(P)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수 출(천억엔)        | 639(637)   | 48     | 53    | 63    | 58    | 58     | 61    | 60    | 58    | -     |
| 수 입(천억엔)        | 721(707)   | 64     | 61    | 66    | 67    | 68     | 62    | 70    | 67    | -     |
| 對한국 수출          | 49.7(49.1) | 4.01   | 4.25  | 5.21  | 5.07  | 4.61   | 4.54  | 4.77  | 4.59  | -     |
| 對한국 수입          | 32.8(32.4) | 3.12   | 2.92  | 2.81  | 2.58  | 2.85   | 2.57  | 3.04  | 2.78  | -     |
| 직접투자(억달러)       | (1,223)    | 234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331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對한국 투자          | (40)       | 7.7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9.1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소비자물가(전기비,%)    | ▲0.2(0.0)  | ▲0.3   | 0.1   | 0.3   | 0.3   | 0.2    | 0.0   | 0.1   | -     | -     |
| 실업율(%)          | (4.4)      | 4.2    | 4.3   | 4.1   | 4.1   | 4.1    | 3.9   | 3.8   | -     | -     |
| 경상수지(천억엔)       | 42.9(47)   | ▲3.6   | 6.4   | 12.5  | 7.5   | 5.4    | 3.4   | 5.8   | 1.6   | -     |
| 엔화 對미달러         | 82.9(80.1) | 89.2   | 93.2  | 94.8  | 97.7  | 101.0  | 97.4  | 99.7  | 97.9  | 99.2  |
| 환율 對원화(100엔)    | (1,413)    | 1,197  | 1,166 | 1,161 | 1,148 | 1,100  | 1,165 | 1,130 | 1,142 | 1,095 |
| 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 | 12.5(12.7) | 12.7   | 12.6  | 12.5  | 12.6  | 12.5   | 12.4  | 12.5  | 12.5  | 12.7  |
| 국채금리(10년, 연리%)  | 0.560      | 0.740  | 0.665 | 0.560 | 0.600 | 0.860  | 0.855 | 0.795 | 0.720 | 0.680 |

주1.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.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3. (P)는 2차 속보치(개정치)

### 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일본기업의 M&A는 효율적인 투자행동인가?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8일  
\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summary/13100001.html>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 정부의 펀드 확대

### □ 2013년에 6개 정부 펀드 설립

- 일본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출자하는 정부펀드가 확대되고 있는데, 2013년에만 6개의 펀드를 설립
  - 일본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는 총 9개로 총 5조 엔 규모
- 일본정부의 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기업지원책으로 시작되었으나, 최근에는 개별 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사례가 많음
  -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경제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펀드의 해산시기를 정하는 등 출구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

〈일본정부의 주요 펀드〉

|                  | 자금규모         | 투자대상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   | 5년후 2,000억엔  | 식품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업자  | 아베정부가 설립한 정부펀드 |
| 환경부동산보급촉진기구      | 350억엔        | 내진성이 큰 빌딩, 시설     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일본정책투자은행·경쟁력강화펀드 | 최대 3,000억엔   | 대기업의 휴면기술 등       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쿨 저팬추진기구         | 600억엔        | 패션, 게임, 전통공예품     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추진기구  | 최대 3,150억엔   | 공항, 하수도사업 등의 운영권 등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관민이노베이션프로그램      | 1,000억엔      | 동경대, 교토대 등의 첨단기술        | 기존 주요 펀드       |
|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     | 5,191억엔      | 중소기업 약 3,000개사    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산업혁신기구           | 최대 약 2조엔     | 저판디스플레이 등 약 50건         | 상동             |
|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     | 약 1조 2,000억엔 | 일본항공 등 과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 | 상동             |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3.10.8)

- 일본정부는 2013년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등 3개의 정부 펀드를 설립
  - 10월 이후 3개의 펀드를 신설할 계획으로 정부보증을 포함한 자금규모는 종래보다 약 30% 증가한 4조 7,000억 엔
- 최근 일본정부 펀드의 상징적인 것이 11월 설립 예정인 쿨저팬추진기구인데, 600억 엔 기금 중 500억 엔을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형은행과 증권회사, 소매업자들이 출자
  - 게임회사에서 과자업체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의 해외홍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
## □ 보조금 성격이 강한 아베정부의 펀드

-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잇따라 설립된 종래의 정부 펀드는 위기대책 성격이 강했음
  - 일본항공의 재건을 지원한 기업재생지원기구, 전기관련 대기업들의 비채산부문의 통합을 지원했던 산업혁신기구는 공공교통, 고용 유지, 기술유출방지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
  - 기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, 위기 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
- 이에 반해 아베정부가 설립한 펀드는 첨단기술과 일본문화의 홍보 등 성장전략에 중점을 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함
  - 보조금 지급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긴 하나 장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에 대한 투융자는 재정수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
  -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펀드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, 정부 펀드조성 시 투자하는 재정투자의 총액은 3,190억 엔으로 최근 3년 합계액의 2.7배로 확대
- 미래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는데, 실패하게 되면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어야 되는 공적자금은 본래 이러한 사업에는 어울리지 않으며, 일본판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기 쉽고 전문 인력도 동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닛케이 신문은 지적
- 벤처엔터프라이스센터(재)에 따르면, 일본 국내 벤처캐피털의 2011년도 투융자액은 1,240억 엔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미국의 1/20에 그치고 있음
  - 민간의 리스크머니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펀드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임
- 물론, 평상시에 개별 기업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게 되면,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나 매수를 노리는 해외펀드 및 해외기업과의 경합도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
  - 그 결과 해외투자자들의 대일투자가 감소하게 되면, 아베 정권이 목표로 설정한 대일 투자배증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임

## □ 정부펀드의 확대에 따른 정부부문의 비대화 등 부작용 방지책

- 일본정부는 9월 정부 펀드의 투자를 체크하는 운용지침을 제정
  -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펀드는 원래 정부가 투자해야 할 사업을 정밀 심사하여, 투자 리스크나 수익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
  - 일본정부는 34개의 점검항목을 만들어 분기별로 펀드의 운영상황을 검증할 방침이나, 감시체제가 기능하지 않으면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이어져, 민간주도의 경제활동을 왜곡시킬 위험도 내포

## □ 역할을 마친 정부펀드의 조기해산 등 출구전략 중요

- 아베정부는 정부펀드를 성장 추진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이나, 위기 시 효과적인 정부 부문의 출자활동도 평상시에는 부작용이 큰 만큼, 역할을 끝낸 정부펀드의 조기 해산이 중요하다고 닛케이신문이 주장
  - 펀드 해산시기(5~20년)를 제대로 지키거나,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해산을 앞당기는 출구전략이 중요
    - 2009년 설립된 기업재생지원기구는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항공에 출자했는데, 일본항공이 2012년 재상장함으로써 약 3,000억 엔의 매각이익을 내자, 역할을 끝낸 재생기구의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음
    -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3년 재생기구를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로 전환
- 아베정부의 정부 펀드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제대책의 성격이 강함
  - 경기가 본격 회복하여 민간 기업이 200조엔 이상의 유동성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, 정부펀드가 민간시장에 눌러앉지 않도록 빠져나갈 시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

### 3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일본정부, TPP교섭에서 일부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검토

- TPP 교섭에서 일본정부가 쌀과 설탕 등 이른바 성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중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철폐대상품목 선별을 검토하기로 하고, 철폐 시 그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
  - 난항중인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
  - 5개 분야 586개 품목 중 가공미 등 부차적인 산품 223개 품목이 철폐대상이 될 전망
- 10월 8일, 발리에서 개막된 12개 TPP교섭 참가국의 정상회담에서 당초에는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기할 예정이었으나,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으로 성명문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며, 금년 중 타결이 어려울 전망
- 일본은 교섭 진전을 위해 관세자유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, 이제까지의 교섭에서 관세철폐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약 80~90%로 제안했으나, 참가국들 가운데 최저수준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
- 일본 국내에서는 중·참의원 양원의 농수산물위원회가 쌀, 밀, 돼지고기, 유제품, 설탕 등 5개 분야는 관세철폐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
  - 일본이 각국에 낮은 자유화율을 제시해온 것은 5개 분야를 성역으로 취급해왔기 때문
    - 5개 분야의 관세분류상 품목 수는 합계 586개이며 총 관세품목은 9,018개 품목으로 5개 분야의 관세를 모두 유지하는 경우 자유화율은 93.5%
    - 일본 정부는 586개 품목 중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옴
  -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(西川公也) TPP대책위원장은 7일 국내조정을 본격화할 뜻을 비치는가 하면,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(石破茂)간사장도 관세세목가운데 철폐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함
- 관세철폐의 초점은 5개 분야 중 부차적인 산품을 나타내는 조정품으로 불리는 품목인데, 쌀가루와 후레이크 등 가공미, 우설 등을 포함, 전부 223개 품목으로 5개 분야 전체 관세품목의 40%정도를 점함
  - 그중에서도 요리용 쌀과 고기 부스러기 등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도 다수 있음
  - 5개 분야의 전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96%로 상승하게 되어, 국내 생산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
    - 5개 분야 외에도 수산물, 가축제품 등 생산지역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있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기업설비투자 완전한 회복세

-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  - 일본 내각부가 10월 10일 발표한 8월 기계수주통계에 의하면,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수주액이 전월에 비하여 5.4% 증가한 8,193억엔으로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후 최대치를 기록
  - 그 결과 2013년 3분기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회할 가능성이 큼
- 설비투자 내역을 보면,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비제조업이 전월비 6.2% 증가한 4,910억 엔으로, 특히 금융·보험업의 시스템 투자와 운수·우편업의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
- 이제까지 비제조업에 비하여 투자가 저조했던 제조업에서도 투자증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  - 제조업의 수주액은 전월비 0.8% 증가한 3,213억 엔으로 증가폭은 소폭이나 2005년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기는 처음
  - 수주 규모가 100억 엔을 상회하는 석유·석탄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자동차와 기계 등 수주액이 큰 가공 산업이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조업의 증가세를 지탱해주고 있음
- 한편, 현재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의 움직임도 있다는 지적

### □ 국내 일감이 줄어든 중소기업들 동남아 진출의욕 높아져

- 일본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의욕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
  - 특히, 제조업 분야에서 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한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아시아에 주목하고 현지조달도 증가하고 있음
  - 이는 거래처의 해외진출로 일감이 줄어든 중소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아시아 쉬프트(Asia Swift)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반영

- 경제산업성의 기업활동 조사에 의하면, 일본 제조업의 해외자회사 수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2,000개 이상 증가, 25,000개를 웃돌고 있는데,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약 60%를 점함
-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중소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
  - 국제협력은행(JBIC)이 2012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, 사업 대상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꼽은 중소기업이 16포인트 상승한 41%에 달하며, 태국도 5포인트 증가한 34%
  - 거래처의 해외생산 및 현지조달이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 일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최대 이유
- 일각에서는 수요업체들의 해외이전으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국내에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머물러서는 고용뿐 아니라 기술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음
  - 이미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는 모노즈쿠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동남아 현지에서 재기·부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, 일본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가 적어도 해외에 전수되고 현지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지적
- 그러나 일본 국내에 모노즈쿠리를 유지,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
  - 일본 정부·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세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도 늘릴 방침
  - 중소기업의 일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
  - 일본금형공업회는 최종제품 생산기반을 일본 국내에 잔류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

## 5 한국관련워치

### □ 도레이, 한국에 고기능 수지생산 공장 신설

- 고기능 수지분야의 탑 메이커인 도레이가 1,900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생산 공장을 한국에 신설하기로 발표
  - 해외 공장 신설은 최초로 해외 및 일본 국내를 합친 생산능력은 현재 보다 50% 증가한 27,000톤
  - 금속을 대체함으로써 부품의 경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기능 수지제품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
- 2016년 4월 가동예정인 열과 약품에 강하여 변질되기 어려운 고기능 수지 PPS(Poly Phenylene Sulfide)의 생산 설비로서 주로 자동차의 축전기와 전기·전자기기의 커넥터로 사용
- 신설되는 한국공장에서는 수지에서 컴파운드(혼합물)이라 불리는 성형 재료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
  - 성형재료의 가공설비는 수지생산에 앞서 2015년 10월 가동예정인데, 한국은 원재료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일본에 비하여 광열비와 노임이 싸다는 이점이 있음
- 도레이는 금년 6월 동 수지를 생산하는 일본 동해공장(아이치현 동해시)의 연산능력을 40% 확대
- 차세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로 고기능 수지의 컴파운드가 연평균 8%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, 도레이는 2016년 세계시장점유율을 현재보다 5% 증가한 약 33%로 높인다는 계획